

1. 총평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는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일반적으로 법령 문제는 평균적으로 4-5문제 정도 출제되었는데, 이번 지방직 9급 문제는 개념 및 이론문제가 19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1문제에 불과했다(참고로 6월 6일 국회직 8급의 경우 법령 문제가 25문제 중 15문제였다.).

난이도를 살펴보면, ‘상’이나 ‘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중’이나 ‘중하’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우수(제가 원하는 점수는 100점), 85점에서 90점까지는 보통, 8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3
정책학	4
조직이론	3
인사행정론	4
재무행정론	2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전자정부론 포함)	2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골고루 출제되었다.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 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개념 및 이론 문제가 19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1문제이다. 다만, 이론(15문제 정도)과 법령(5문제 정도)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및 문항 분석

중상	-
중	4, 5, 6, 9, 11, 15, 16, 17, 19, 20.
중하	1, 2, 3, 7, 8, 10, 12, 13, 14, 18.

특별히 어렵거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없어 따라 분석할 문항은 없다고 본다.

4. 당부 사항

1) 2020년 지방직9급 행정학개론 문제는 모든 문제가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2020 지방직 9급

-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일원론
- ② 경제공항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 ④ 신공공관리론

[해설] ①②③(X).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건설을 내걸고 추진했던 제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일원론(발전행정론) 등은 모두 정부의 기능 확대와 관련된다.

④(O).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신자유주의에 바탕으로 두고 등장한 정부개혁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와 노정기로 구분하고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로 한정하고, 노정기는 시장성을 조사해서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 82-84, 160-165. 핵심체크, pp.36,65-67.

2.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지방직 9급

- | | |
|---------|----------|
| ① 지방교부세 | ② 재산임대수입 |
| ③ 조정교부금 | ④ 국고보조금 |

[해설] ②(O).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미하며,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한다.

①③④(X).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의존재원에 속하고,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의존재원에 속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

자 주 재 원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임시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이월금 등
지방채			
의 존 재 원	광역 →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광역시와 도가 시·군에 보전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
	지방교부세 (일반재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 조정률
		특별교부세	특별한 재정수요(특정재원)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
	국고보조금 (특정재원)	장려적 보조금	자치사무
		부담금	단체위임사무
		교부금	기관위임사무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882. 핵심체크, p.402..

3.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2020 지방직 9급

- ① 팀제 조직
- ② 위원회 조직
- ③ 매트릭스 조직
- ④ 네트워크 조직

[해설] ①(X). 팀제 조직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 단위이다.

②(X). 위원회 조직은 1인이 지배하는 단독제(monocracy)에 대비되는 조직으로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

제 행정기관으로서, 민주적·동태적 조직이다.

- ③(O). 매트릭스조직(matrix, 복합조직, 행렬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팀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장방형 조직, 입체적 조직)이다. 즉, 매트릭스조직은 기능구조(U형)와 사업구조(M형)의 학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이다.
 ④(X).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이다.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중심 조직은 전략·계획·통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생산 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410–416. 핵심체크, pp.182–184.

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2020 지방직 9급

-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해설] ①(O). 상동적(유형화, 선입견) 오차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stereotyping)에 의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
 ②(X).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는 무난하게 중간 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을 말한다.
 ③(X).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는 관대화 경향의 반대 개념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말한다.
 ④(X).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는 초기의 업적에 평가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막바지효과(시간적 근접오류, recency error)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87–589. 핵심체크, pp.261–262.

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9급

-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해설] ①(O). 공익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로 본다. 따라서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O).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평등한 자유의 원리)와 제2원리(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제2원리에는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있는데,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③(X). 파레토 효율성(파레토 최적, Pareto efficiency, Pareto optimum)은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를 파레토 효율 상태라고 한다. 즉, 파레토 최적 상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는 못한다.
 ④(O).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목표–수단 적합성을 의미하는 실질적(내용적) 합리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절차적 합리성이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185–208. 핵심체크, pp.76–86.

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9급

- ①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③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 ④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해설] ②(X).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과 관련되며 때문에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복잡하고 분석이 곤란한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통솔범위를 넓히기 곤란하다.
 <기술과 구조(C. Perrow) 및 정보통신기술과 구조(R. Daft)>

구 분	예외(다양성) 적음(정보의 불확실성 낮음)		예외(다양성) 많음(정보의 불확실성 높음)	
	기술(craft, 장인) : 고급 유리제조회사		비루틴(non-routine) : 핵연료추진장치	
분석 곤란 (정보의 모호성 높음)	•다소 유기적	•소량의 풍성한 정보	•유기적(낮은 복잡)	•다량의 풍성한 정보
	•중간 공식화	•하이터치	•낮은 공식화	•하이테크·하이터치
	•중간 집권화	•개인적 관찰	•낮은 집권화	•면접회의
	•작업경험	•면접회의	•훈련과 경험	•MIS, DSS
	•보통 통제의 폭		•좁은 통제의 폭	
	•수평적, 언어		•수평적, 회의	
분석 가능 (정보의 모호성 낮음)	루틴(routine) : 건재용 철근		공학(engineering) : 엔지니어링 회사	
	•기계적(높은 복잡)	•소량의 분명한 계량적 정보	•다소 기계적	•다량의 계량적 정보
	•높은 공식화	•보고서, 규정집, 계획표	•중간 공식화	•하이테크
	•높은 집권화	•TPS	•중간 집권화	•데이터베이스
	•낮은 훈련경험		•공식적 훈련	•MIS, DSS
	•넓은 통제의 폭		•보통 통제의 폭	
	•수직적, 문서화		•문서, 언어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394. 핵심체크, p.174.

7.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지방직 9급

-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③ ㄴ, ㄹ

- ② ㄱ, ㄷ
 ④ ㄷ, ㄹ

[해설] ㄱ. ㄴ. (X).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이다.

ㄷ.(O).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연구하기 때문에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O).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303–305. 핵심체크, pp.128–129.

8.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지방직 9급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 보충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 ② 포괄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해설] ①(O). 박스 내용은 보충성 원칙에 해당한다. 보충성 원칙은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에 사무 및 기능의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시·군 및 자치구 사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사무 → 국가 사무).

<소극적 보충성과 적극적 보충성>

(1) 소극적 보충성의 원리 :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기능(사무)은 상급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보충성의 원리 :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정부는 필요한 최소 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X). 포괄성의 원칙은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사무이양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원칙이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785. 핵심체크, pp.356.

9. 조직구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9급

① 분업의 원리 - 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④ 조정의 원리 -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해설] ①(O). 분업(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구성원에게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O). 통솔범위의 원리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③(X).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직속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④(O). 조정의 원리는 행정의 구심적인 힘으로서, 행동을 동시화(synchronization)시켜 분화된 여러 활동을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382–385. 핵심체크, pp.167–168.

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9급

① 개방형 인사제도

② 계약제 임용제도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해설] ①②③(O).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제를 바탕으로 하며, 신분보장이 강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특권집단화·관료주의화를 초래하여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만들며, 환경 변동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 일정한 기간만 근무하게 하는 계약제 임용제도, 특정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계급정년제의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④(X).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 등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승진 기회 보장+신분보장+사기와 보람’ 등으로 구성되며,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의회 정치 또는 정당정치의 폐단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익성·통일성·계속성·중립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의 강화는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이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25–528. 핵심체크, pp.232–233.

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2020 지방직 9급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① 통제

② 관리

③ 기획

④ 감축

[해설] ③(O).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하였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한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의 기능 중 기획 기능을 중시한다.

①②④(X). 통제 기능은 품목별 예산, 관리 기능은 성과주의 예산, 감축 기능은 영기준 예산에서 중시되는 기능이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742–743. 핵심체크, p.336.

12.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2020 지방직 9급

- | | |
|---------------------|-----------------|
|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 ② 의회의 국정감사 |
|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

[해설] ①(X).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②③④(O). 의회의 국정감사,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통제 주체에 따른 분류 : 내부통제와 외부통제(Gilbert의 분류)>

구 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계층제(상관)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의한 통제 • 정부업무평가(구 심사평가)에 의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비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에 의한 통제 • 대표관료제 • 공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통제 • 시민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 정당에 의한 통제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918. 핵심체크, p.418.

13.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2020 지방직 9급

- | | |
|--------------|----------------------|
|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 ②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
|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

[해설] ①(X).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류, 직렬, 직군으로 분류하여 인사관리하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동일한 직책을 장기간 담당하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분업화에 도움을 준다.

②(O).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rank-in-job)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난이도)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 직렬 및 직급별로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제도이다.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

③(X). 계급 간 차별이 큰 것은 계급제이다. 계급제 하에서는 계급에 따라 사회적 평가나 보수 등의 차이가 크며, 계급 간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 반면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급 간의 차별이 크지 않다.

④(X). 직위분류제는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의 과정을 거쳐 직급 체계를 형성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분담의 합리화를 촉진시켜주며,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50–552. 핵심체크, pp.244–246.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2020 지방직 9급

- | | |
|-------------------------------|-----------------------------|
| ① BTO(Build-Transfer-Operate) | ② BTL(Build-Transfer-Lease) |
| ③ BOT(Build-Own-Transfer) | ④ BOO(Build-Own-Operate) |

[해설] ①(X).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투자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민간에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②(O).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투자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하고, 민간에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민간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③(X). BOT(Build-Own-Transfer)는 민간이 투자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시설의 소유권과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되,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④(X). BOO(Build-Own-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Build)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Own) 시설을 운영하는(Operate) 방식이다.

<민자유치 방식>

구 분	BOT 방식	BTO 방식	BLT 방식	BTL 방식
개념	민간이 운영 : 기업은 시설 대상 자산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정부가 운영 : 기업은 Lease 대상 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사례	수의사업(고속도로, 항만, 경전철, 지하철, 하수처리장, 환경시설 등)	비수의사업(학교, 군인아파트,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수목원, 문화복지시설 등 투자비회수가 곤란한 시설)		
민간 운영(임대) 기간	일반적으로 20년		일반적으로 20년	
민간의 위험부담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최소 운영수익 보장 제를 실시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폐지하였다).		민간에게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음.	
소유권 이전 시기	운영 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 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 기간 동안의 시설의 소유권 주체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91–92. 핵심체크, p.40.

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지방직 9급

-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 ① ㄱ
③ ㄱ, ㄴ

- ② ㄷ
④ ㄴ, ㄷ

[해설]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J. S. Mill).

- ㄱ.(X). 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temporal precedence) :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여야 한다.
- ㄴ.(O). 경쟁가설(rival hypothesis)의 배제원칙 또는 비허위적 관계 : 결과변수의 변화가 추정된 원인이 아닌 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ㄷ.(O). 규칙적 동양성(同様性) 또는 상시연결성(constant conjunction) : 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321. 핵심체크, p.138.

16.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9급

-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해설] ①(X).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異種) 사업 간에도 비교할 수 있다.

②(O).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③(O).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할인율이 높을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낮게 평가된다.

④(O).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따라서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66–271. 핵심체크, pp.111–112.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지방직 9급

- ㄱ. 민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① ㄱ, ㄴ
 ③ ㄴ, ㄷ

- ② ㄱ, ㄹ
 ④ ㄷ, ㄹ

[해설] ㄱ.(X).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모형은 혼합주사모형이다. 민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 기준을 중시한다.
 ㄴ.(O). 점증주의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바꾸어도 소폭으로 바꾸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ㄷ.(O).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X).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회사모형(타협모형, 연합모형)의 특징이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82–292. 핵심체크, pp.117–122.

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9급

-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해설] ①(O).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O).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으로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간접지출(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에 해당한다.
 ③(O). 조세지출은 조세특혜(tax preference), 합법적 탈세(tax loophole) 혹은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하는데, 이는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 의미이다.
 ④(X). 조세지출의 유형에는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특혜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 준비금, 가속상각, 세 부담의 이연 등이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666–668. 핵심체크, pp.299–300.

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지방직 9급

-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 ① ㄱ, ㄴ
 ③ ㄴ, ㄷ

- ② ㄱ, ㄷ
 ④ ㄱ, ㄴ, ㄷ

[해설] ㄱ. ㄷ.(O).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환경 또는 그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유비쿼터스 정부는 모든 네트워크(any-network)와 모든 기기(any-device)를 바탕으로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any-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이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브로드밴드나 무선인터넷의 경우 웹2.0시대에 발달하기 시작한 기술이나, 웹3.0시대의 유비쿼터스 정부가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ㄱ.)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ㄴ.(O).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는 웹3.0시대의 정부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부를 말한다.

<참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1995~2000년	2005~2010년	2015~2020년
	World Wide Web	Web2.0	Web3.0 (Real-World Web)
	Government1.0	Government2.0	Government3.0 (U-Government) (Smart Government)
접근성	정부 중심	시민 중심	개인 중심
	사용자 열람형 하이퍼링크 웹 문서 열람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 기반의 앱 개발	사용자 맞춤형 시맨틱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First-stop-shop (단일 접속 창구)	One-stop-shop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일방향 정보제공	양방향 정보제공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제공	정보공개 확대	실시간 정보공개
서비스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모바일 서비스	중단 없는 서비스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정부·민간 융합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서비스의 지능화
	채널	무선인터넷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업무통합	단위 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통합(공공·민간의 협업)
기반기술	브라우저, 웹 저장	브로드 밴드, Rich Link/Content Models	시맨틱 기술, 센서 네트워크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961. 핵심체크, p.438.

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지방직 9급

-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① ㄱ
 ③ ㄱ, ㄴ

② ㄷ
 ④ ㄴ, ㄷ

[해설] ㄱ.(O).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O).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이 될 수 있다.

ㄷ.(X). 민원행정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해준다. 따라서 민원행정은 행정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632. 핵심체크, pp.282.